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8년 10월 17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8년 10월 17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 22일(수)과 23일(목) 양일간에 걸쳐 각각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 성과와 과제(Institutionalizing Gender Budgeting : Achievements and Challenges)」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 개최

- 주제 :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 성과와 과제』
- 일시·장소 : 2008년 10월 22일(수) 9:30-17:00,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
2008년 10월 23일(목) 9:30~17: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언어 : 한·영 동시 통역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 초청자 미디어 취재 지원

- 이번 심포지움은 세계 성인지 예산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움 참석차 내한하는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했 예정.
- 이번 심포지움과 관련하여, 내한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홍보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 바랍니다.

* 현재 심포지움 첫째날인 10월 22일(수) 오후 4시반 이후 시간이 우선 조정 가능합니다.

홍보담당 황애리(3156-7296)

□ 국제심포지움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10월 22일 수요일과 10월 23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함.
- 본 심포지움은 작년에 열린 1차 국제심포지움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어디까지 왔나?>에 이어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고안하고, 성인지 예산서(안)의 개발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성인지 예산 제도의 현재

* 사례로 보는 성인지 예산

- 특정지역의 가로등 예산을 줄였을 때 그 지역의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사례
- 신규 공공시설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한 사례
- 현재 지하철 전동차 내의 손잡이는 170cm 높이에 위치함으로써 키가 작은 어린이나 여성들에게 불편. 손잡이의 높이를 하향조정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한 사례
- 군에서의 여성인력은 전 간부 대비 2.6% 수준이며, 군 의료 서비스 정책의 초점은 남성에게 맞춰져 있음. 특히 여군의 산부인과 진료는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여군의 의료 수혜를 확충하도록 군 의료서비스 정책의 개선 필요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성 불평등이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한편,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율과 인간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고려할 때,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음.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들이 성인지 예산 분석과 제도화를 시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 대하여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7년 「성인지예산센터」를 설립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음.

□ 심포지움을 통해 본 성인지 예산 제도 사례와 해법

- 양일간 열리는 이번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의 첫째 날은,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돌아보고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경험을 들어보는 <세션 1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성인지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연계 방안을 파악하고,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의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통계 사례를 들어보는 <세션 2 성인지 예산과 성과관리 예산제도>로 구성됨.
- 둘째 날은 독일의 성인지 예산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2009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평가해 보는 <세션 3 성인지 예산서 만들기>, 이탈리아의 연금시스템, 한국 조세제도와 근로장려세제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해보는 <세션 4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로 진행될 예정임.

□ 심포지움을 통해 본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본 심포지움에서 “성인지 예산이 “예산과정에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 절차, 기구”를 일컫는 만큼 그 분석의 범위는 매우 넓고, 예산주기와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연구위원은 “성인지 예산서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연구위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여성가구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도록 세부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기대

- 이번 심포지움은 UNIFEM,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에서 온 성인지 예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수렴하는 한편,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점검·공유하고자 함.
- 또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국민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의 성공적인 성인지 예산 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별첨 1. 발표자 약력

1. 니슬린 알라미 (Nisreen Alami, UNIFEM 프로그램 매니저)

Nisreen은 2002년부터 UNIFEM 성인지 예산 프로그램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게 성인지 예산 작업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전에는 Amman에 위치한 UNIFEM 아랍국가 지역사무소에서 아랍 여성들의 경제적 권리와 거버넌스 이슈관련 일을 했고, "Save the Children"에서도 일한 바 있다. 그녀는 요르단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학사, 1994년 런던 정경대에서 발전학 석사를 획득했다.

그녀는 현재 권리의 측면에서 재정지출 접근법의 개발, HIV/AIDS,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정부지출(자원과 서비스 접근)이 불평등한 영역에 성인지 예산의 적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녀는 훈련매뉴얼인 "성인지 예산 실행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practice)" (2006), 성인지 예산과 여성의 출산 권리에 관한 자료집 (a resource pack on GRB and Women's Reproductive rights) (2006), "새로운 원조 방식과 파트너십에서의 성평등의 증진" (2006) 등 UNIFEM 간행물 작성에 기여했다.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 유엔여성개발기금

2. 엘리사베스 클라제 (Elisabeth Klatzer,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GM 카운슬러)

Elisabeth Klatzer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공 행정 석사를 취득했으며,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했다. (논문: 성인지 예산: 국제적인 경험과 방법론)

그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 정부의 성 주류화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인지 예산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연방 차원, provincial과 local 차원 등에서)

그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많은 출판물을 작성하였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시민 사회 단체인 '감시 단체. 젠더와 공공 재정(Watch Group. Gender and Public Finance)'의 공동 설립자이며, 동시에 성인지 예산 전문가들의 유럽 네트워크인 유럽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European Gender Budgeting Network)의 회원이다.

3. 패트리샤 에굴리오르 아란스 (Patricia Eguilior Arranz, 스페인 안달루시아 통계청장)

Patricia는 Cordoba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1984년 이래로, 안달루시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서 일해 왔다. 여기서, 그녀는 financial Management Senior Administrators Corp.에서의 여러

직책을 맡았었다. 1984년에서 1996년 사이에 그녀는 General Directorate of Planning Affairs에서 경제 기획 및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 일했으며, 1996년에서 2002년까지는 General Directorate of European Funds에서 Head of Service in Funds and Community Programs로 일했다.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그녀는 General Planning Directorate의 책임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안달루시아 통계 사무소(Andalusian Statistical Office: IEA)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4. 크리스틴 파에버 (Christine Faerber, 독일 HAW 교수)

독일 Hamburg의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 Potsdam의 institute Competence Consulting의 연구소장이다. 그녀는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여성의 진보를 향상시키는 거버넌스 툴 (governance tools that enhance the advancement of women)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다. 2006년에 그녀는 독일 연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실행 가능성 (feasibility)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성인지 예산 실행을 위해 베를린시, 기타 지방정부들과 연계하여 일하고 있다.

5. 카를로 디폴리티

(Carlo D'Ippoliti, 이탈리아 존카봇 대학 교수)

Carlo D'Ippoliti는 이탈리아 로마의 John Cabot 대학의 조교수이자, 로마의 LUISS 대학의 경제경영학부의 research fellow이다. 그는 2006~2008년간 국회의원 Senato della Repubblica 등의 컨설턴트로 일한 경험이 있고, European Commission의 DG "Information Society"와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의 공동 저자의 하나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유럽의 사회경제정책과 경제사상사이다.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 개인 행동에 대한 경제이론 비교, 사회과학 연구 평가 등에 관한 논문과 정책보고서를 썼다.

Carlo D'Ippoliti는 현재 이태리 Lazio지역의 성인지 예산 연구 프로젝트에 관여하고있으며 이탈리아 공공연금제도에 대한 첫번째 성인지 예산분석을 수행하였고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별첨 2. 발표원고 초록

니슬린 알라미 (Nisreen Alami, UNIFEM 프로그램 매니저)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Institutionalizing gender responsive budgeting)

성인지 예산은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여성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발전에서의 gender gaps과 공공정책의 객관적 목표량에 대한 여성의 권리달성에서의 열악함을 측정가능한 결과를 갖고 해결하라는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메커니즘과 이를 담당할 정부기관을 정의하고 그림으로써, 성 평등을 향한 진보에서 성과의 질에 관한 책임시스템(accountability system)을 촉진한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을 포함한 정책결정의 주류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또 성평등의 진보를 궁극적 목표로 정책결정을 보다 성인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제의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 차원에서 추구된다:

- 공공기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최적의 세수조치를 찾는데 필수적인 보다 참여적인 과정을 보장하는 **Budget policy making 과정**
- 발전격차, 예산 배분, 발전산출물과 결과(results)간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는 시스템과 틀을 보장하고, 예산의 성인지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예산과 편성지침**
- 자원과 서비스에의 여성의 평등한 접근을 지원하는 배분과 세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히 sectoral level에서의) **예산 툴 (Budgeting tools)**

더 많은 국가들이 국가예산시스템에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다양한 모범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예산과정에 이 조치를 제도화하는 도전거리가 남아 있다. 이 글은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건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모범사례들을 개괄할 것이다. 인디아, 에콰도르, 모로코, 칠레 등의 경험으로부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제도화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 국가 전체의 정책 과정 및 틀과의 alignment
- 법률과 규제
- 적합한 기술적 역량과 함께 제도적 구조 세우기
- 정부 안과 밖의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책임시스템(accountability system)을 적절히 배치하기

엘리사베스 클라제

(Elisabeth Klatzer,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GM 카운슬러)

성인지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의 관계

(The interlinkage between gender budgeting and performance-based budgeting)

성인지 예산과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모두 공공재정에서는 혁명적인 개념이다. 혁명적이라 함은 이 두 개념이 모두 공공예산을 수립하는 전통적 방식에 도전한다는 것이고, 두 개념 모두 전통적인 투입중심이고 행정·관료적인 공공예산과 예산과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한다는 의미한다. 이 두 흐름은 거의 동시에 발생했는데, 둘 간의 연결은 여전히 약하다. Sharp(2003)의 시도를 제외하곤, 둘간의 상호연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행전략은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했다.

본고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 글은 성인지 예산과 성과중심 예산간의 상호관계를 점검하고 이 두 개념을 통합할 방법에 주목한다. 또한 사례로서 오스트리아에서의 성인지 예산의 통합과 예산정책에서 성과중심 예산을 위한 변화가 소개될 것이다.

크리스틴 파에버 (Christine Faerber, 독일 HAW 교수)

성인지 예산과 범부처 목표로서 경제적 성 평등의 추구

(Gender Budgeting and the Pursuit of Economic Gender Equality as a Cross Sectional Target)

성인지 예산은 효과적인 거버넌스 툴이다. 이는 예산 과정으로 잘 통합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예산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일어난다. 이는 정부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하며, 매우 빠박한 스케줄을 가지는 과정이다. 성인지 예산은 젠더 분석의 도입으로 이 과정에 도전한다. 포인트는 재무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들과 공공행정기관들이 관여된 이 과정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이다.

이는 예산준비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인지 분석이 실시되고 이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포함한다. 핵심은 성인지 분석틀을 어떻게 만드는가하는 분석적 접근이다. 즉 예산서에 반영될만큼 충분히 가치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예산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이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요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분량만 커지고 읽기 어려운 서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가 중요한데 이러한 지표는 재정적 지원, 보조금과 수당을 받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여주고 또한 인프라투자자과 같이 쉽사리 개별로 나누기 어려운 지출등 일반예산에 내재된 성평등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한 qualified한 방식으로 성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과정은 행정에서 성 주류화 과정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세출과 세입예산이 매년 분석되면, 성 주류화 과정은 개선·강화될 것이다. 예산은 중앙정부의 도구이다. 이는 입법과 정치과정의 영향을 보여준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 내에서의 법적 체계와 정치적인 의사 결정의 성별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효과적인 조절과 모니터링 도구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들의 정치를 향상시킬 기회를 갖는 셈이다. 성인지 예산은 민주화의 도구이며, 여성의 권한강화의 수단인데,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이 국회와 대중들에게 예산의 성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눈에는 기술적인 도구처럼 보이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

화시키고 사회발전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상황을 진정으로 개선시키는 독특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도구로 발전한다.

패트리샤 에굴리오르 아란스

(Patricia Eguillor Arranz, 스페인 안달루시아 통계청장)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통계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성 평등의 증진은 사회 목표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지만,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사회경제발전모델에서 성 평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안달루시아에서는 성평등이 단지 사회정의(justice)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 성불평등을 경제발전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카를로 디폴리티

(Carlo D'Ippoliti, 이탈리아 존카봇 대학 교수)

이탈리아의 성인지 예산: 연금 시스템을 중심으로

Gender Practice and Current Situation of Italy's 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Pension System

논문의 첫 부분은 이탈리아 성인지 예산 실행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비록 EU가 성 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성인지 예산을 승인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인지 예산의 예가 없다. 반면 지방 차원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실행이 증가세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경험의 두 개의 큰 흐름을 구별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지방 정부의 서비스의 제공의 실용적인 평가(비록 때때로 개념적인 조사가 부족하긴 하지만)를 발견할 수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공공 행정 예산 전체의 보다 포괄적이고 이론에 기반한 여러 분석을 발견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시민 사회의 보다 많은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데, 이는 성인지 예산이 주로 행정부를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논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시 국가적 차원으로 돌아와서, 국가적 차원의 이니셔티브의 부족에 대한 가능한 원인을 짧게 강조할 것이다. 이 중에서, 주제의 내재적인 어려움(inherent difficulty of the subject matter)과 분배 다툼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의 정치적인 실현 불가능성(political unfeasibility of clearly showing distributional conflicts)이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발표가 초점을 맞춘 "공공연금" 사례연구에서 쉽게 보여질 수 있다. 이 세출은 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공공 부문의 가장 높은 outflow를 구성한다. 더 나아가 이탈리아의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는 성 평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 작업은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공공연금의 성인지 예산을 산출하는 첫 시도가 될 것이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경험

한국의 성인지 예산은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제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제도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 글은 법 제정 이후 성인지 예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국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는데,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3월에 “예산안 편성 지침서”가 발표되고 동년 9월까지 정부의 2010년 예산요구안이 완성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원년은 2009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준비기간이 2007-2008년으로 2년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2년에 그치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마감날짜가 정해진 일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2년의 연구수행과정은 매우 밀도있게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지난 2년 간 겪은 도전과 질문, 요구에 대응하면서 얻게 된 성과와 못 다룬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난 2년의 기간은 평가하기에 상당히 짧은 것이다. 현재 과제로 남은 문제들은 시행과정에서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해결되어 ‘성과’로 자리바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연구위원)

성인지 예산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연계: 한국 사례의 정책적 과제와 교훈

이 논문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분석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이 논문은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점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의 수준을 점검한다. 특히 성별영향평가가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점검한다. 둘째, 이 논문은 기존의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성인지적 관점을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 적절한 성과정보와 분석 수단의 개발을 수반한 점진적 접근방법이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 사업 평가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서 관련 규정은 2010회계년도부터 적용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성인지 예산안 작성을 위한 지침과 양식의 적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할 성인지 예산서 시안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 작성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2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였다. 또한 예산안 작성 지침 및 양식, 성인지 예산서 시안 개발을 위해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시범사업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기존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합성의 문제, 추진체계의 모호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성인지 예산서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유용한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본 논문은 한국조세제도를 성별 균형 차원에서 분석한다. 제도특성상 성별 차등이 발생하기 쉬운 소득관련 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성의 관점에서 조세제도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한국 소득세제는 성별 불균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단위, 세율, 과표구간 등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없었다. 다만 공제제도의 운영에서는 여성근로자 추가공제, 여성에 대해 완화된 부양가족 기준 등 여성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 외 자산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단위가 세대단위로 조세제도의 기본단위인 개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가정내 이차소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자산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성별 불균형은 제도 도입당시의 목적과 성별균형 등을 감안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성인지적 분석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심층적 다룬 연구는 없었다. 그간 조세·재정정책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괄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유인에 관하여는 실증연구 보다는 개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즉, 노동공급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근로장려세제가 나아갈 방향을 재 정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 3. 프로그램**2008년 10월 22일 수요일****사회** : 김은경 연구기획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09:30-10:00** **등 록****10:00-10:20** **개회식****개회사** : 김태현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환영사** : 원윤희 원장 (한국조세연구원)**10:20-12:20** **세션 1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과 과제****사 회** : 민무숙 기획조정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제 1 :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돌아보기**

니슬린 알라미 (Nisreen Alami, UNIFEM 프로그램 매니저)

발제 2 :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경험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 론 : 크리스틴 파에버 (Christine Faeber, 독일 HAW 교수)

김경희 교수 (중앙대)

12:20-14:00 **오 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최)****14:00-16:30** **세션 2 성인지 예산과 성과관리 예산제도****사 회** : 윤영진 교수 (계명대학교)**발제 1 : 성인지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방안**

엘리사베스 클라제

(Elisabeth Klatzer,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GM 카운슬러)

발제 2 : 성인지 예산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연계

박노옥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발제 3 :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통계

파트리샤 에굴리오르 아란스

(Patricia Eguilior Arranz, 스페인 안달루시아 통계청장)

토 론 : 윤용중 예산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전기택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년 10월 23일 목요일**09:30-10:00** **등 록****10:00-12:00** **세션 3 성인지 예산서 만들기**

사 회 : 박정수 교수 (이화여대)

발제 1 : 경제적 성평등의 추구하고 성인지 예산: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크리스틴 파에버 (Christine Faeber, 독일 HAW 교수)발제 2 : 한국의 2009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 평가
마경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토 론 : 니슬린 알라미 (Nisreen Alami, UNIFEM 프로그램 매니저)
차인순 입법심의관 (국회)**12:00-13:30** **오 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최)****13:30-16:00** **세션 4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

사 회 : 김경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제 1 : 이탈리아의 성인지 예산 : 연금시스템을 중심으로
카를로 디폴리티 (Carlo D'Ippoliti, 이태리 존카봇 대학 교수)발제 2 : 한국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전병목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발제 3 :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성인지적 분석
조선주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토 론 : 엘리사베스 클라페
(Elisabeth Klatzer,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GM 카운슬러)
김완석 교수 (서울시립대)**16:00-17:00** **종합토론**

사 회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 론 : 참석자 전원

17:00 **폐회리셉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